



주간 통일정세

2011-4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 태양열·양묘장 현지지도(10/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지구에 새로 지어진 태양열설비센터를 현지지도 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현지지도에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이 수행
 - 통신에 따르면 센터 측은 최근 태양열 물가열기(발전기) 생산기지와 에너지 절약형 종합청사를 건설했으며 태양열 물가열기를 매년 수천대씩 대량생산해 보급할 예정
 -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중앙양묘장 현지지도 소식도 알림.
 - 양묘장 현지지도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리룡하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함께 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당창건일 맞아 '노동당은 김일성당' 강조(10/10,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10일 노동당 창건 66주년을 맞은 북한은 김일성 주석 동상 참배, 당 창건 기념행사로 전역이 온종일 분주
 - 조선중앙방송은 10일 '당창건 66돌 반향' 기사에서 "전체 당원과 근로자는 철세위인들의 영도에 따라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으로 수놓아온 우리당의 60여 년의 역사를 감회 깊이 돌이켜본다"며 "이 땅 위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고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빛을 뿌릴 것이다'라는 사설에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과 전략전술도 수령님에 의해 마련됐고 당의 업적도 수령님의 존함과 잇닿아 있다"며 "김정일 동지의 령도 밑에 자기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됐다"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

- **김정일, 은하수음악회 관람·오리공장 현지지도(10/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당 창건 66주년을 기념해 열린 은하수 10월 음악회 영원히 한길을 가리랴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김정은 외에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김평해 당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비서가 관람을 함께 함.

- 또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 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경옥 당 중앙군사위원,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리룡하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 제1부부장, 김원홍·윤정린 당 중앙군사위원,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이 참석
- 통신은 김 위원장이 최근 개보수를 마친 두단오리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전했으며, 현지지도에는 김경희, 장성택, 문경덕, 박봉주가 수행

● 김정일·정은, 노동당 66주년 연회 참석(10/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당 창건 66주년(10·10)에 즈음해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연회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문경덕 당비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등이 참석
- 중앙통신은 리영호 부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했다고 전했으나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회 장소 등은 밝히지 않음.
- 중앙통신은 "연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해 역세계 싸워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 열정이 차 넘치는 속에 진행됐다"고 전함.

● 김정일부자, 대동강과수농장내 신축공장 현지지도(10/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신축된 대동강 돼지공장과 대동강 그물공장, 자라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김 위원장은 먼저 대동강 돼지공장을 둘러보고 공사를 맡았던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의 건설자들을 격려하고 이어 대동강그물공장, 대동강자라공장을 둘러봄.
- 현지지도는 김정은 외에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태중수 당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비서, 리룡하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수행했으며, 리명수 인민보안부장과 리병삼 조선인민내무



군 정치국장 등은 현지에서 김 위원장 일행을 맞았다고 통신은 전함.

● **北내각, 올 경제계획 완수 방안 등 논의(10/15,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 북한 내각이 최근 최영림 총리 주재로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3분기 사업평가와 올해 경제계획 완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중앙통신은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5일지를 인용해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3분기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정형·총화(현황 및 평가)와 올해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 수행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고 밝힘.
- 회의에 보고된 3분기 사업의 주요 성과는 ▲1분기 대비 방적사 109%, 일반천과 뜨개옷 112%, 종이 165% 증산 ▲제2차 평양 제1백화점의 1천400여종 350만여 점 상품 전시 ▲지방예산수입계획 113.3% 초과수행 등임.
- 이어 올해 경제계획 완수를 위한 과업으로 석탄·전력·금속공업 부문의 증산, 철도운수 수송 증대, 제3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전시회 준비, 홍수 피해 복구 및 평양 꾸미기, 내각 사업 강화 등의 문제가 논의
- 이날 회의에는 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성원이 참가했으며 내각 직속 기관 책임일꾼과 관리국장, 도·시·군 인민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장·지구계획위원장·식료일용공업관리국장, 주요 공장·기업소의 지배인 등이 방청

● **김정일, 함남 단천지역 광산 2곳 현지지도(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단천시의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룡양광산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들 광산에서 과학기술도입 정형과 광물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了解, 실태 파악)한 뒤 생산량 증대를 독려하고 광산마을 내 국숫집을 방문
- 김 위원장은 "탐사를 적극적으로 앞세워 더 많은 예비 광량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채굴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줄기차게 내밀어야 한다"며 "채굴설비를 부단히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 비서, 곽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수행했고 현지에서 리찬화 단천지구광업총국장, 리찬화·석덕환 단천지구광업총국 당 책임비서 등이 영접

● **김정일·정은, 함흥 주요기업소 현지지도(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료 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제련소 등 주요 기업소를 현지 지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소의 생산을 정상화하려면 전기, 무연탄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대줘야 한다"며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고 가짓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이어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제련소도 잇따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생산량 증대를 독려
- 이날 현지지도에는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 비서, 곽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은하수 10월음악회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 관람(10/12, 중통·중방)
- 김정일, 개건된 '두단오리공장' 현지지도(10/12, 중통·중방)
- 김정일, 黨중앙위·黨중앙군사위 주최 '黨장건 66돌 연회' 참석(10/12, 중통)
- 김정일, 새로 건설된 대동강자라공장과 대동강돼지공장·대동강그물공장 현지지도 및 「감사」 전달(10/14, 중통·중방)
- 김정일, 대흥청년영웅광산과 용양광산 현지지도(10/16, 중통·중방)
- 김정일, 함흥시(咸南道) 중요기업소들(2.8비날론연합기업소·흥남비료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제련소) 현지지도(10/16, 중통·중·평방)

■ 기타 (대내 정치)

- 【사설】 김일성 父子의 "黨건설·선군영도력" 찬양과 "국방력 강화 및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 조국통일투쟁" 再次 주문(10/10, 중통·민주조선)
- '조선노동당은 영원한 사랑의 품' 및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당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사회주의 복' 題下 등으로도 金父子의 '당건설 위업과 사회주의' 선전 一色(10/10, 중통·평방)



나. 경제

- **"나진~하산 철도 13일 시범운행"(10/11, 연합뉴스)**
 - 러시아 철도공사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시범열차를 13일 운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은 11일 "러시아 측이 13일 나진~하산을 오가는 시범열차 운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시범열차가 도착할 북한 두만강역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차운행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함.
 - 러시아 철도공사는 그동안 화물운송을 위해 나진~하산 구간 52km 철로를 보수해왔고, 이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中, 北무산광산 이어 해산광산도 본격 운영(10/11, 연합뉴스)**
 - 북한 내 최대 구리광산으로 중국이 51%를 투자한 해산청년광산이 지난 달 준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중국 완상(萬向)자원유한공사와 북한 해산동광이 2007년 합자로 설립한 해중광업합영회사가 운영을 맡은 이 광산은 준공식에 앞서 작년 가을부터 부분적으로 가동을 시작
 - 코트라(KOTRA) 중국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측은 현금과 설비 등에 51%, 북한이 광업권과 토지사용권 등에 49%를 출자했다고 RFA가 전함.
 - RFA는 "북·중 지하자원 교역의 증대로 북한의 지하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가운데 중국이 무산광산의 50년 채굴권 획득에 이어 해산광산의 운영권도 확보함으로써 북한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두 개 광산을 모두 손에 넣게 됐다"고 논평

- **中관광단, 함북 칠보산·청진시 관광(10/11, 조선중앙통신)**
 - 중국 관광단이 함경북도 칠보산과 청진시를 관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 중앙통신은 이날 "리중원 중국 투먼(圖們)시 공산당위원회 상무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관광단이 9일과 10일 칠보산을 유람했고 11일 청진시의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밝힘.

- **"北주민 식량배급량 여전히 하루 200g 불과"(10/12, 미국의소리(VOA))**
 - 북한 당국이 곡물 수확철인 9월에도 주민에게 정상배급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하루 20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12일 전함.
 - WFP는 최근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7월부터 성인 1명당 하루 20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으며 9월까지 3개월째 200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하루 정상 배급량이 성인기준으로 곡물 700g인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셈으로, 북한 당국은 주로 밀, 보리, 감자 등을 배급하고 있는데 이런 식량을 하루에 200g씩 먹는다고 해도 성인 1명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3분의 1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WFP는 설명
 - WFP는 지난 4월 말 북한에 긴급구호를 시작하면서 1년간 매달 북한주민 350만 명에게 3만2천800t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지부진해 8월에는 단 185t을 전달하는 데 그쳤으나 10월에는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아일랜드 등 국제사회의 기부금으로 구매한 5만4천t의 밀, 쌀, 설탕, 식용유 등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 긴급구호 시작 이후 처음으로 목표량보다 많은 식량을 북측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방송은 전함.
- "北함북, 중국에 道단위 외화벌이 식당 개설"(10/12, 오늘의북한소식)
- 북한의 함경북도가 중국 랴오닝(遼寧)성 안산시에 외화벌이를 위한 식당을 개설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가 12일 전함.
 -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24호)에서 대북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며 "평양을 제외하면 지역차원에서는 처음"이라고 밝힘.
 - 소식지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도당 간부는 "식당을 중국에 낸 것은 우리 도(道)의 모든 봉사망들이 원료난, 자재난으로 운영을 못하게 됐기 때문"이라며 "어떻게든 외국에서 원료를 자체적으로 구해보려는 목적에서 개설한 것"이라고 말함.
 - 소식지는 "사업장을 해외에 진출시킨다는 것은 지방당에서도 직접 수익을 내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해외진출 식당들은 수입에 관계없이 1년에 10만 달러 이상의 상납금을 중앙당에 바쳐야 해 선뜻 해외에 나갈 수 없다는 소리도 나온다"고 전함.
 - 또 평양에서는 올해 초부터 은행계좌에서 사용금액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가 외화상점이나 호텔식당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소식지는 그러나 북한에서는 현재 생필품 대란이 벌어져 굶주리는 주민이 더욱 늘고 있지만 중앙당 호위사령부 차원의 '폭풍검열' 이후 새로 등장한 중앙당과 지방당 관료들은 간부용 승용차를 지급받는 등 윤택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
- "北 나선 특구에 자본주의 불씨"(10/13, 뉴욕타임즈(NYT))
-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NYT)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제특구인 나선 특별시를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
 - 이 신문은 현재 나선 지역에는 홍콩 기업이 개발한 카지노 리조트가 있으며 중국 관리들과 기업인들이 이곳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의 한 건설업체는 이곳에 판매장을 확장해 북한 상인들이 중국산



제품을 시장 가격에 판매하도록 했으며, 오랜 기간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에서 시장 가격이 등장했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평가

- 중국 정부가 임차한 항구에서는 중국 북동부 지역 탄광에서 실려 온 석탄이 상하이로 가기 위해 선적되고 있으며, 러시아 기업도 또 다른 항구 한 곳을 임차해 사용 중인데, 이처럼 물자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북한의 외딴 항구도시에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
- NYT는 또 북한 당국이 공산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 오랜 기간 정체돼온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문호를 서서히 개방하고 있다고 전함.
- 나선시에서 경제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황철남 부시장은 "나선시 당국은 해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세계에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함.

● **"북양강도 수력발전소들 부실공사 논란"(10/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양강도에 건설한 수력발전소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부실공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이 방송은 최근 양강도 지역에서 탈출한 주민의 말을 인용, 북한이 약 10만 명의 인력을 투입해 2007년 삼수발전소를 준공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발전기는 1대만 가동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전함.
- 이 탈북자는 "삼수발전소 전기로는 계산 시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명절 공급도 못한다"며 "원래 이 발전소 건설은 노동당 선전부 이침꾼들이 김정일에게 잘 보이느라고 시작됐다. 2008년 독이 수압을 이기지 못해 터진 적도 있다"고 말함.
- 삼수발전소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로 댐을 만든 것이 아니라 40m 간격으로 시멘트 기둥을 세운 뒤 그 속에 진흙과 막돌을 넣고 겉에만 시멘트 포장한 것이어서 사실상 댐 구실을 못한다고 그는 주장
- 방송은 양강도 백암군에 발전용량 6만kW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 역시 댐에서 물이 새 부실공사라는 비난을 받았고, 올해 안에 1호 발전소를 준공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망

● **"폴란드 北대사관 이벤트회사 차렸다"(10/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인 김평일 대사가 있는 폴란드 주재 북한 대사관이 최근 'AmbasadaStudio'라는 이름의 이벤트 회사를 설립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이 회사는 각종 회의, 교육, 전시회 등을 기획하면서 음식과 장소를 제공하며, 이곳에서 현지 기업들의 신제품 발표회나 기업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한편 북한은 독일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새 여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RFA가 전함.

- **北고려은행 전자결제카드 '고려' 발행(10/14, 노스코리아 이코노미워치)**
 - 북한의 고려은행이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카드 '고려'를 출시해 전자결제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북한경제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워치'가 14일 전함.
 - 이 사이트는 이날 "독일의 민간단체인 한스 자이텔 재단으로부터 입수했다"며 '고려카드의 모습과 홍보용 전단의 사진을 공개
 - 전단의 안내문에 따르면 이 카드는 고려은행의 전자카드 결제체계에 가입한 외화 취급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안내문에 "(카드를) 현금 대신 대금 지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는 것을 보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데빗)카드의 형태인 것으로 추정
 - 북한에서 전자결제카드가 발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은행에서 외화를 충전한 뒤 호텔이나 외화 상점 등에서 이용하는 방식의 전자결제카드 '나래'를 발행하고 서비스를 시작함.

- **"어딜가나 건설장"...北 평양 새단장에 '올인'(10/16, 연합뉴스)**
 -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선전하는 북한이 내년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에 맞춰 평양시 새 단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평양에 주재하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2일 "지금 평양은 어디를 가나 건설, 건설이다. 기중기가 만(滿)가동하고 용접 불꽃이 설 새 없이 튀어나오는 광경을 여기저기서 목격하게 된다"고 전함.
 -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해온 만큼 내년 4월에 주민에게 새롭게 단장된 평양을 선보임으로써 강성대국 진입이란 시각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북한의 속내가 읽힌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북한은 2008년 1월 평양에 10만호의 살림집(주택)을 건설해 2012년까지 주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경제난으로 철강과 원자재가 부족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초중반부터 다시 공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
 - 또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주택공사가 한창인 만수대지구와 마주 보는 동평양지구에는 대중탕과 가족탕 등 목욕시설과 이발소, 미용실, 식당이 입주하는 종합시설(1만7천400㎡)과 4계절 이용 가능한 원형빙상장을 포함한 인민야외빙상장(9천660㎡)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두 시설은 연말까지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손님을 받을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그 외에도 북한은 주택과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일 외에도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도로변 펜스도 새로 설치하는 등 도시 미화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에 강성대국 진입을 공언한 만큼 예년보다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이 만수대지구에서만 진행되는 등 경제난 여파도 관찰되지만 상징물이 될 만한 시설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기타 (대내 경제)

- 전국청년돌격대부문 청년기동예술선전대 경연, 9.27~10.11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진행(10/11, 중통)
- 평양 피아노합영회사, 소형그랜드피아노 생산 시작(10/11, 중통)
- 北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평남 남포시), "10.9일까지 연간계획을 103.5% 초과수행" 자랑(10/12, 중통)
- 北 황해간석지건설사업소, '능금도(황남 은률군) 간석지 방조제 공사'에서 성과 이룩(10/12, 평방)
- '라진↔하산 철도구간 시범열차운행' 행사, 10.13 '北-러친선각'(咸北 라선市 두만강역지구)에서 진행 및 연회 개최(10/13, 중통)
- 北 낙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지난 10년간 인민경제계획을 130%이상 초과수행으로 인민생활향상에 기여" 선전(10/15, 중통)
- 평양과수농장의 현대화공사 착공 및 봉화화학공장에서 컴퓨터설비 구비 등 근로자들 원격교육 실시 자랑(10/16, 중·평방)

다. 군사

● 북한軍 이상동향.. 전투기·미사일 전진배치(10/12, 연합뉴스)

-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 상황과 유사한 북한군(軍)의 이상 움직임이 포착돼 우리 군이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당국자는 12일 "북한군이 최근 후방기지의 전투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기지로 남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군이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을 백령도 북방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NLL 해역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기지에서 이동발사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함.
- 특히 북한군은 최근 동·서해상으로 여러 기의 대함 미사일과 KN-06 지대공 미사일 등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북한군은 사곶기지, 등산곶 등 서해안에 샘릿·실크웜(사거리 83~95km) 등 지대함 미사일과 SA-2(사거리 13~30km), SA-5(사거리 260km)를 비롯한 지대공 미사일을 집중 배치 중이라고 뉴스는 전함.
- 정부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지난해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데다 우리 군 수뇌부 교체기인 점을 감안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 대비태세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검열 강화에도 외부정보 계속 유입"(10/11, 미국의소리(VOA))
 - 북한 당국이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려고 단속을 강화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 외신이 '국경없는 기자회(RSF)'를 인용해 11일 전함.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2004년에 이어 7년 만에 북한의 언론환경을 조사한 보고서를 10일(현지시각) 발표
 - 이 보고서는 "북한정부가 비(非)사회주의 바람을 막기 위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북한당국의 엄격한 언론·정보 통제에도 북한내 정보유통의 자유를 증진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늘고 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대북방송과 DVD, USB 등에 담긴 동영상 등을 통해 북한 내에서 정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변화와 점진적 개방은 정권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보고서를 작성한 벤자민 이스마엘 RSF 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은 VOA에 "북한은 더이상 외부와 단절된 나라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3대세습 체제 구축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더 강하게 탄압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함.
 -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관영언론에 대해 "7년 전과 같은 보도내용과 형식으로 김정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체주의 독재권력을 위해 일하는 북한의 언론환경에 우려를 나타냄.

- "北주민 840만 명 영양부족...3명 중 1명꼴"(10/11, 자유아시아방송(RFA))
 - 굶주림으로 영양부족 상태인 북한주민 수가 840만 명으로 추산한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10일 공동 발표한 '2011 세계의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는 북한주민 3명 중 1명꼴인 84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라고 평가
 -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굶주리는 인구가 1990년대 초반 420만 명에서 90년대 중반 700만 명으로 늘었고, 이후 10년 이상 식량난이 이어지면서 2008년에는 전체 인구의 35% 수준인 82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에 놓였다고 분석

- 북한 곳곳에서 보이는 김정은 우상화(10/11, AP통신)
 - AP통신이 10일 평양발로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 분위기에 대해 보도
 - 이 통신은 김정은을 북한 인민의 마음속에 후계자로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선전이 활발하지만, 그가 북한 내에서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등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며 컴퓨터의 달인이라고 북한에서 알려졌지만 정확한 출생일이나 결혼 여부, 심지어는 어머니의 이름조차도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다고 통신은 전함.
- AP통신은 김일성 일가의 정통성에 대한 강조가 지금까지 강했던 적은 없다면서 김정은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노래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발걸음'은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을 그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라고 지적
- 한편 원산 수력발전소의 표응규 매니저는 발전소 벽에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을 기리는 세 번째 기념판을 붙였다면서 '걸출한 장군'이라는 빨간 글자가 새겨 있다고 AP통신에 말함.

● 北 "평양서 고구려 침성대터 발굴"(10/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종합대 역사학부 연구집단이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 있는 평양민속공원건설장에서 고구려시기 침성대로 볼 수 있는 건축지 유적을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중앙통신은 이 건축지가 4각으로 된 중심시설과 다른 7각으로 된 시설로 구성돼 있고, 이 유적에서 나온 숲의 연대측정 결과 5세기 초로 밝혀졌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고구려 시기 침성대터는 신라 경주의 침성대보다 200여 년 앞선 것"이라며 "이런 사실은 고구려가 삼국시기 천문학 발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평가

● 北가극단 '양산백과 축영대' 中 순회공연(10/12, 연합뉴스)

- 북한의 3대 가극단 가운데 하나인 피바다가극단이 내달부터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는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의 중국 순회공연에 나선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피바다가극단은 내달 초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중국 고전을 개작한 양산백과 축영대의 중국 순회공연을 한다고 선양의 소식통들이 12일 전함.
- 피바다가극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지난해 5월 6일 베이징에서 첫선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후허하오터((呼和浩特)와 창샤(長沙), 우한(武漢), 푸저우(福州), 선전(深川), 충칭(重慶), 시안(西安), 텐진(天津), 창춘(長春) 등 중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2개월여에 걸쳐 흥루몽을 공연
-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비롯해 방북한 중국 인사들이 빠짐없이 이 공연을 관람하는 등 북한과 중국은 이 가극을 북·중 친선의 상징으로 삼고 있음.



- WHO "北 10만 명당 345명 결핵, 아시아서 3번째"(10/12, 연합뉴스)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북한에서 인구 10만 명당 345명꼴로 결핵에 걸렸다고 12일 밝힘.
 - WHO가 이날 발표한 '2011 세계결핵통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작년 결핵 발병률은 동티모르, 미얀마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높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WHO에서 결핵퇴치사업을 담당하는 필립 글라지우 박사는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북한의 결핵발병률은 세계에서 높은 수준으로 한국(10만명당 97명)과 비교해도 수배"라며 "북한 내 열악한 의료시설, 필수 의약품의 부족, 비위생적인 상수도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함.

- "北 휴대전화 가입 100명당 1.77명 불과"(10/13, 미국의소리(VOA))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북한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100명당 2명이 채 안 돼 가입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1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함.
 - 방송에 따르면 ITU는 최근 200여 개국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를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률은 100명당 1.77명으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에서 2번째"라고 밝힘.
 - 그러나 북한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률은 높아지는 추세이며, 방송은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의 조선체신회사와 합작해 세운 '고려링크'의 판매원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VOA 기자에게 "가입자가 70만 명 정도 되며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고 전함.

- 北 아리랑 폐막...4년 연속 연장 공연(10/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자랑하는 집단체조 '아리랑'의 올해 공연이 2차례 연장 끝에 지난 10일 폐막했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방송은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중국의 고려여행사를 인용, "지난 8월1일에 시작한 이 공연은 애초 9월9일까지 진행되기로 했으나 9월16일로 연장됐고 이후 재연장돼 10월10일에 막을 내렸다"며 "북한은 2008년 이래 4년 연속 공연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밝힘.
 - RFA는 올해 공연에 대해 관람객들의 관람기와 사진 등을 토대로 "예년에는 없었던 중국어 대사나 카드섹션이 등장하는 등 북중친선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고 평가

- 北피바다가극단, 中서 3개월 순회공연(10/15, 천룡망(千龍網))

 - 피바다가극단 중국 순회공연 대행사인 중국대외문화그룹은 피바다가극단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중국을 순회하며 양측을 공연한다고 밝혔다고 천룡망(千龍網)이 15일 보도
 - 대외문화그룹은 앞서 지난 11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내달 초 이 가극단을 첫 공연하기로 북한 측과 협약했으며, 따라서 피바다가극



단의 중국 순회공연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더라도 이달 말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여 중국 체류 기간은 3개월여가 될 것으로 보임.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피바다가극단 중국 순회공연 대행사인 중국대외문화그룹은 피바다가극단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중국을 순회하며 양측을 공연한다고 밝혔다고 천룡망(千龍網)이 15일 보도
- 대외문화그룹은 앞서 지난 11일 라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이달 초 이 가무극을 첫 공연하기로 북한 측과 협약했으며, 따라서 피바다가극단의 중국 순회공연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더라도 이달 말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여 중국 체류 기간은 3개월여가 될 것으로 보임.

2. 대외정세

가. 일반

- **중외교부 대변인 "힘 닿는대로 北 도와"(10/10,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겨울을 앞두고 대북 식량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줄곧 힘 닿는 범위 안에서 조선(북한)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그는 이어 "미국 등의 여러 국가들이 최근 조선에 인도주의적인 식량 원조를 하려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해당 국가들 간에 쌍방이)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패네타 "北 · 이란 핵야욕 중단시켜야"(10/12, 연합뉴스)**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 이란 같은 국가들의 핵확산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 야욕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패네타 장관은 이날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가진 '국방 우선순위: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급격한 국방예산 삭감의 위험성을 지적
 - 그는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실험했으며, 이란은 필요 이상으로 핵능축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북한, 이란)는 국제적 의무 존중을 거부하고 핵 야욕으로 핵심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핵심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
 -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거부하면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사실상 인정해 왔음.



- 후진타오 "中朝 협력관계 계속 발전시킬터"(10/13, 조선중앙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중·조(中朝) 친선협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후 주석은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공동 명의로 김 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앞으로 보낸 답전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 건국 62주년(10.1)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준 데 사의를 표한 뒤 "중국의 당과 정부는 계속 확고부동하게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넣을 것"이라고 강조

- 클린턴, '수주내 北접촉' 시사(10/13, 로이터통신)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취할 광범위한 문제들과 관련해 북한과 계속 접촉할 용의를 가져왔다"면서 추가 북미대화 가능성을 밝힘.
 - 국무부가 13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지난 11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추가 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함.
 - 그는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향후 수주일 내에 더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 수주일 내에 북미간 추가 대화가 있을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
 - 그는 구체적으로 이달 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대표간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확정이 된다면 이는 우리가 확실히 발표할 사안"이라고 답함.

■ 기타 (대외 일반)

- 최태복·김영일(黨 비서들), 10.11 駐北 쿠바대사와 담화(10/11, 중통)
- '北-러 외교관계 설정(1948.10.12) 63돌' 즈음 "김정일의 訪러(8.20~27)는 "전통적 조-러 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킨 중대한 사변" 평가 및 "공동의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발전 될 것" 강조(10/12, 중통·노동신문)
- 北 공보위원회('안동춘' 문화상)-라오스 공보, 문화 및 관광성 대표단('보쌩캄 윈다라' 관광상) 사이 회담, 10.12 평양에서 진행(10/12, 중통)



3. 대남정세

-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홍양호 前차관(10/10, 연합뉴스)**
 - 통일부는 10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에 홍양호(56) 전(前) 통일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사장은 재단 이사회에서 구성한 이사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임.
 -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측 법인이지만 원활한 지원·관리를 위해 남측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남측에서 5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북측에서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 8명이 파견돼 있음.

- **금강산 외국인관광 시작...17일부터 4박5일(10/10, 연합뉴스)**
 -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국제관광이 실시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10일 자체 홈페이지에 "외국 여행사로는 유일하게 금강산 관광상품을 판매하게 됐다"며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나선~금강산 국제관광을 진행하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12일까지 신청해달라"고 공지
 - 이 여행사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들처럼 중국 훈춘에서 북한 나선으로 이동한 뒤 만경봉호를 타고 금강산을 방문하는 코스로 관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 **평불협, 北에 밀가루 60t 지원(10/10, 연합뉴스)**
 -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는 북한에 밀가루 60t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힘.
 - 연합뉴스에 의하면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과 평불협 관계자 등은 오는 13일 방북, 개성 봉동역에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중앙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밀가루 60t을 전달할 예정

- **개성공단 건축공사재개 허용.. 버스노선 확대(10/11, 연합뉴스)**
 - 정부는 11일 5·24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또 개성공단 내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도로를 개보수하고 출·퇴근 버스도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11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개성공단 방문 이후 정부에 요청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차원에서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힘.
 - 정부는 신축공사 외에 기존 입주기업 5개사가 진행 중이던 증축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으며, 개성공단 내 소방서 건설을 위해 조만간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착공을 거쳐 내년



말까지의 완공기로 함.

- 북측과 협의를 거쳐 개성시와 개성공단을 잇는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도로(4.5km) 개·보수 공사는 연내에 착공할 예정이며, 통일부는 도로 개·보수는 우리 측이 직접 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2005년 11월 해당 도로 개·보수를 위해 자재와 장비를 북측에 지원했는데 6년 만에 도로 상태가 심각히 훼손된 상황을 감안해 직접 시공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북측 근로자 공급 확대를 위해 출·퇴근 버스를 확대 운용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개성공단 반경 20km 이내 지역인 개성시와 인근지역에만 버스를 운행해왔지만, 운행지역을 반경 40k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황해도 금천, 봉천, 평산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도 개성공단까지 출·퇴근 할 수 있어 근로자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를 견지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

● 정부, 중국·일본에 금강산관광 투자 자제 요청(10/11, 연합뉴스)

- 북한이 외국과 손잡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중국과 일본 측에 투자 자제를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경주에서 유엔 국제관광기구(UNWTO) 총회에 참석 중인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11일 일본, 중국 대표와 차례로 개별 면담을 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했으며,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대아산을 비롯한 우리 측 재산을 일방적으로 압류하고 외국 투자자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며, "일본과 중국이 금강산 관광에 투자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
- 면담에는 일본 국토교통성 켄 오쿠다(Ken Okuda) 부대신과 중국 국가여유국 두 지양(Du Jiang) 부국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한국 정부의 의사를 본국에 잘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北 "KAL기 피랍자 생사 확인 불가"(10/11, 연합뉴스)

-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대표 황인철)는 피랍자 11인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와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힘.
- 연합뉴스에 의하면 가족회는 지난 4월20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서신을 보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에 피랍자에 대한 생사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ICRC로부터 이런 내용의 북한 측 답변을 전해 받음.



- **정부, 대북 경협업체 대출금 상환유예(10/12, 연합뉴스)**
 -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북 경협업체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4개 대북 경협기업에 대해 이달 초 대출금 상환을 1년간 유예했다"고 밝힘.
 - 통일부는 지난 8월 초 위탁가공업체를 포함한 대북 교역업체 165개사에 대해서도 298억 원 규모의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함.

- **민화협, 北사리원에 9차분 밀가루 전달(10/14,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4일 오전 밀가루 100t을 개성육로를 통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민화협은 이번 지원분까지 총 1천854t의 밀가루를 사리원시에 전달했으며, 3차 모니터링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방북할 계획

- **남북합영기업 1호 '평양대마방직' 계약파기 위기(10/14, 연합뉴스)**
 - 남북한 합영기업 1호인 평양대마방직이 계약파기 위기에 처했다고 김정태(68) 평양·안동대마방직 회장이 1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 측 사업 파트너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최근 팩스를 통해 합영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는 문건을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보내왔다고 말함.
 - 민경련은 이 문건에서 공장이 오랫동안 가동되지 못하는 책임은 남한 측 사업 파트너에 있다고 전제, 합영사업의 지속적 진행 여부와 김 회장의 10월중 방북 가능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인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남북 양측이 절반씩 투자해 2008년 10월 평양 선교 구역에 준공한 평양대마방직은 남한 기술자와 북한 근로자들이 삼베와 비단 등 섬유제품을 생산했으나 2009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정부가 북한 내륙 방문을 금지한 데 이어 작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현재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뉴스는 전함.

- **北, 통일부 운영 인터넷 방송 비난(10/1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통일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통일방송'을 "반통일 대결 모략방송"이라고 비난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진실을 오도하는 너절한 모략방송 따위로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자주통일의 흐름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며 "괴뢰 통일부는 민심의 지향과 대세에 역행하는 어리석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모략방송 높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대미 전방위 대화공세(10/16)

-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의 공세적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양상임. 16일(현지시간) 북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6~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2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등 고위인사를 보내 미국 국무부 인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NEACD는 특히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북미 고위급 대화와 시기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북한의 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2차 대화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비핵화 사전조치'를 내용적으로 수용하는 모종의 제안을 해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하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가 주최하는 반관·반민(1.5트랙)의 NEACD에는 한국에서 외교통상부 김홍균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가하며 미국에서도 국무부 한국담당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음.
- 지난해 11월 방북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확인했던 지그프리트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공동 소장의 재방북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정부 소식통은 "헤커 박사가 다시 방북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가 오가고 있으나 일정 등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헤커 박사의 그동안 행적을 감안할 때 그가 다시 방북한다면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헤커 박사는 1986년부터 97년까지 세계 최고권위의 핵연구소인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지낸 인물임. 북한은 종종 헤커 박사의 권위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해왔음.
- 북한은 2003년 10월 사용 후 핵 연료봉 8천개를 재처리했다고 밝힌 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해 1월 헤커 박사를 초청, 영변 원자로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공개했음.
- 첫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에도 그를 불러들여 자신들이 핵보유국 지위에 올라섰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음. 2008년 2월에도 헤커 박사가 방북 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할 태세가 됐다"고 밝힌 뒤 그해 6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음.
- 이에 앞서 북한은 17~20일 미국 조지아대에서 열리는 '남북미 세미나'



- 에 리종혁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엔 대표부 인사 등 7~8명을 참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대남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참석할지 주목됨.
-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북미 대화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미국 내 기류는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 전에는 6자회담으로 곧바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신중한 편"이라고 말했다.
 - 외교소식통은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북·러 정상회담에서 '모라토리엄'을 언급하는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는 만큼 당분간 대화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지가 관건이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인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반도 정세 '북미대화'로 중심추 이동>(10/16)

- 한반도 정세의 중심추가 '북미대화'로 옮겨가고 있음. 6자회담 재개를 겨냥한 북미 양국의 '담판'이 시작된다는 의미임. 6자회담 조기재개 국면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지루한 교착국면에 갇히느냐가 좌우되는 중대 국면에 돌입하는 셈임.
- 이는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북미 간 접촉 움직임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고 있음. 17일 미국 조지아대에서는 '남북미 3자 트랙 2' 회의가 개최되고 18일 태국 방콕에서는 미군 유해발굴 문제를 위한 북미 협의가 열려 북미대화의 전반적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이번 북미대화는 7월 뉴욕에서 열린 1차 대화에 이어 석 달 만에 열리는 2차 대화임. 1차 대화가 서로 의중을 파악하는 '탐색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서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시도하는 '본게임'에 해당함.
- 남북-북미대화가 병행되는 현 국면의 흐름을 감안하면 7월 말리 남북-뉴욕 북미대화의 1라운드에 이은 2라운드 결정판의 의미가 있음. 지난 달 22일 베이징 남북대화의 '바통'을 이어받아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끌어낼 협상의 뭉치 넘어온 것임.
- 북미대화는 오는 26~28일 독일 베를린 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됨. 모처럼 북미 사이에 협상테이블이 꾸러지지만 기상도가 그리 맑지는 않음. 주요쟁점을 둘러싼 '간극'이 워낙 큰 탓에 가시화된 접점이 나올 것으로 예단하기는 일러 보임.
- 최대 쟁점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인 비핵화 사전조치임. 미국은 한국과의 공조 틀 속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북한 측은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UEP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식의 논리를 설파하고 있음. 한미의 전제조건 이행



- 요구를 철회 또는 약화하려는 노림수임. '본게임'을 앞두고 양측은 이미 기 싸움에 돌입했음.
- 북한은 이달 초부터 여론전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일방적인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했음. 8일에는 "세계가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이에 미국은 평양을 향한 압박 메시지를 발신했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억압정권은 결국 몰락하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원칙'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했음. 원론적 발언의 형식이지만 북한에 대해 '근본적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직후 한미 정상이 단합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에 미치는 심리적 압박감은 클 것으로 보임. 일본도 한미 공조에 가세했음. 우리 측 임성남 6자회담 수석대표는 13~15일 방일해 북핵공조 의지를 다졌으며 이는 19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될 예정임.
 - 양측의 이 같은 기싸움이 협상테이블로 이어질 경우 가시화된 점점 도출은 어려워 보임. 다만 북한이 어떤 '보따리'를 들고 오느냐에 따라 상황은 가변적임. 북측이 사전조치 일부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그 '수위'와 '내용'에 따라 협상의 진전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의미임.
 -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한미가 요구하는 사전조치 가운데 실질적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WMD 모라토리엄 선언을 수용하고 나머지를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식의 전략적으로 모호한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옴.
 - 문제는 현재 워싱턴이 북한의 부분적 사전조치 이행을 '적당히' 받아들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임. 최근 워싱턴을 다녀온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과거에 비해 북미대화에 대한 열기가 떨어졌다"고 말했음. 북한이 진정성을 담은 '확실한 카드'를 보여주어야 미국 조야에 퍼진 북미대화 '회의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임.
 - 이에 따라 협상의 궁극적 진전 여부는 한미가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사전조치로 꼽는 UEP 중단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IAEA 사찰 부분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큼.
 - 협상을 의외로 복잡하게 만들 변수도 있음. 북한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협정·체제를 논의하자고 '역제안'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사전조치 수용 여부에 따라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음.
 - 외교가 일각에서는 양측의 기싸움 속에서 국면이 다시 경색되고 도발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그러나 이미 대화국면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고 내년 국제정치적 '빅뱅'기를 앞두고 '전략적 관



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6자로서는 판 자체를 깨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 이란 예상이 높음. 특히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북한으로서는 추 가도발이 가져올 후과를 가장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임.

-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북미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가시적 접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채 '3라운드'로 대화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점쳐짐. 이 같은 줄다리기 과정에서 한국이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해법으로 협상의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됨.

● 임성남 "北 행동 필요성에 日과 의견일치"(10/16)

- 임성남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데 일본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사흘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15일 밤 귀국한 임 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측과 그간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처할지 협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임 본부장은 방일 기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지난달 열린 제2차 남북 비핵화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공조방안을 논의했음.
- 그는 또 일본 정부와 의회, 학계 관계자들도 두루 만나 신임 인사를 하고 북핵문제 및 북일대화 등에 대한 일본 측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 졌음. 그는 이달 안으로 러시아도 방문, 6자 회담 참여국 수석대표들과 의 상견례를 마무리할 계획임.

나. 미·북 관계

● 北 리종혁, 美서 열리는 '3자 민간대화' 참석(10/12)

- 다음 주 미국 조지아대에서 열리는 학술토론회인 '남북미 3자 트랙 2'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대표단 9명이 참석함. 특히 한국의 일부 기자들도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돼, 북한이 이에 응한 배경이 주목됨.
- 11일(현지시간) 조지아대 국제문제연구소(소장 박한식 교수)에 따르면 토론회에는 북측에서 리 부위원장을 비롯, 명경일 아태평화위 실장과 김천희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국장, 림룡철 조국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 차건일 군축평화연구소 소장, 북한 유엔대표부의 박철, 최일 참사관 등이 참석함.
- 미국에서는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와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담당 정책국장, 잭 프리처드 한국경제연구소(KEI) 소장 등 8명이 참석함.
- 한국은 정치권에서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과 윤여준 전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의원, 학계에서 백낙청(서울대), 문정인(연세대), 백영철 김성민



(이상 건국대) 교수와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이 참석함. 토론회 패널로 언론인도 초청돼 MBC와 중앙일보 기자가 북한 당국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게 됐음.

- 북한이 외교 당국자가 참석하는 남북미 3자 접촉에서 남측 언론의 참석을 수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들 언론을 통해 남북관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이번 토론회 의제는 ▲북한 핵무장의 명분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 ▲북한 비핵화의 선행조건 ▲정전협정의 대안 ▲6자회담 재개 ▲한반도 서해상 군사충돌 방지책 ▲한미 양국의 서해 군사훈련 ▲북한 식량난 ▲남측의 대북 투자 ▲한반도 집단평화체제 구축 등임. 북측은 이런 내용의 의제를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음. 세미나는 개회식 인사말과 폐회식을 제외하고 토론 등 모든 과정이 일절 공개되지 않음.

● 성 김 주한미대사 상원인준 통과(10/14)

- 성 김 주한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음. 미 상원은 이날 성 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음. 이에 따라 한미 수교 이후 12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주한미대사가 곧 부임하게 됐음. 성 김 신임대사는 조만간 한국으로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 성 김은 지난 6월 신임 주한미대사로 지명됐으나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공화당 상원 2인자인 대북강경파 존 카일(애리조나) 의원의 인준보류(Hold) 요구로 지난 4개월여간 인준이 보류돼 왔음. 성 김 대사는 당초 미 의회의 8월 휴회 전 상원 인준을 통과한 뒤 8월 말 부임할 예정이었음.
- 이번 인준안 통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날 미 상·하원 연설 직전에 이뤄졌음. 성 김 대사의 인준이 늦어지면서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는 이미 서울을 떠난 캐슬린 스티븐스가 주한미대사 자격으로 배석했음.
- 성 김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6자회담 특사로 지명돼 상원 인준을 거쳐 '대사' 직급으로 승진하며 한국계 첫 대사 기록을 세웠음. 또 2006년 한국계로 첫 국무부 한국과장에 임명되는 등 미 국무부에서 첫 한국계 임명 기록을 이어가고 있음.
- 미 의회 소식통은 "카일 의원을 포함해 상원에서 많은 의원들이 오바마 정부의 북한 정책이 상당히 소프트해졌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그동안 인준보류의 배경을 전했다. 카일 의원은 지난 12일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참여하는 대가로 어떤 금전적 유인책도 주지 말라고 촉구했음.

● "北 나선 특구에 자본주의 불씨"〈NYT〉(10/14)

-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제특구



- 인 나선 특별시를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음. 나선 특별시는 북한이 중국과 공동개발 중인 북한 북동부의 항구로 나진항과 선봉항이 통합돼 이루어졌음.
- 이 신문은 현재 나선 지역에는 홍콩 기업이 개발한 카지노 리조트가 있으며 중국 관리들과 기업인들이 이곳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한 건설업체는 이곳에 판매장을 확장해 북한 상인들이 중국산 제품을 시장 가격에 판매하도록 했음. 오랜 기간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에서 시장 가격이 등장했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평가했음.
 - 중국 정부가 임차한 항구에서는 중국 북동부 지역 탄광에서 실려 온 석탄이 상하이로 가기 위해 선적됨. 러시아 기업도 또 다른 항구 한 곳을 임차해 사용 중임. 이처럼 물자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북한의 외딴 항구도 시에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음.
 - NYT는 또 북한 당국이 공산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 오랜 기간 정체돼온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문호를 서서히 개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 나선지구는 중국과의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지역으로 북한 당국은 지난 1991년 이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음. 해외 애널리스트나 기업기들은 북한의 투자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난색을 표시했음.
 -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국이 지난 1980년대 조그만 어촌이던 센첸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중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던 것처럼 나선지역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해외 기자들도 최근 중국 기업인들과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해 취재를 한 바 있음. 겉모습으로 봤을 때 나선을 신흥도시라고 부르는 힘 듬. 중국의 국경에서부터 비포장도로를 3시간이나 달려야 갈 수 있는 이 지역은 주변이 온통 옥수수과 소나무만 있는 시골임.
 - 사람들은 말이나 소달구지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은 지붕 위에서 오징어를 말리기도 함. 20만명의 주민들이 살지만 수시로 정전이 되는 등 전력사정도 안 좋음. 도심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자동차나 상점, 식당은 거의 없는 실정임.
 - 하지만 이 지역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갖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 찾기 힘든 물류의 요충지로 꼽힘. 그리고 이곳의 무역교류가 늘어나면 북한 경제개발에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리들은 보고 있음.
 - 북한 당국은 또 외국 자본을 유치해 각종 첨단 공장들도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음. 나선시에서 경제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황철남 부시장은 "나선시 당국은 해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세계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다. 중·북 관계

● 中외교부 대변인 "힘 닿는대로 北 도와"(10/10)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겨울을 앞두고 대북 식량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줄곧 힘 닿는 범위 안에서 조선(북한)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의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음.
- 그는 이어 "미국 등의 여러 국가들이 최근 조선에 인도주의적인 식량 원조를 하려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해당 국가들 간에 쌍방이)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中, 北무산광산 이어 해산광산도 본격 운영(10/11)

- 북한 내 최대 구리광산으로 중국이 51%를 투자한 해산청년광산이 지난 달 준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음.
- 중국 완상(萬尙)자원유한공사와 북한 해산동광이 2007년 합자로 설립한 해중광업합영회사가 운영을 맡은 이 광산은 준공식에 앞서 작년 가을부터 부분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음.
- 코트라(KOTRA) 중국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측은 현금과 설비 등에 51%, 북한이 광업권과 토지사용권 등에 49%를 출자했다고 RFA가 전했다.
- RFA는 "북·중 지하자원 교역의 증대로 북한의 지하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가운데 중국이 무산광산의 50년 채굴권 획득에 이어 해산광산의 운영권도 확보함으로써 북한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두 개 광산을 모두 손에 넣게 됐다"고 논평했음.
- 중국 국경에서 3.5km 정도 떨어진 해산동광의 매장량에 대해 북한은 40만t, 중국은 22만t으로 추정하고 있음. 채굴이 본격화되면 연간 5만~7만t으로 예상되는 생산량 전망을 중국이 가져갈 것으로 보임.

● "창지투계획, 中소수민족지역 개발과 유사"(10/11)

- 원동욱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는 11일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 계획은 중국이 변경지역 및 소수민족지구에 펼치는 개발정책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 교수는 이날 '심화되는 북·중·러 삼국의 협력관계'를 주제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중국의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은 단순한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 국가전략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음.
- 그는 "창지투 개발계획은 물동량 등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이익이 전혀 나지 않는 계획"이라며 "향후 경제협력의 발전을 예상한 투자라기보다는 철도 등을 통해 북한의 광산에서 자원을 가져오겠다는 '자원수탈'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 원 교수는 한국 정부에 "북한의 경제개방을 지원하면서 남북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해 대중의존도 심화, 중국의 북한 선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을 앞두고 중국산 제품과 경쟁을 통해 경공업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며 경공업 원자재 지원, 지하자원의 교환 등에서 중국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러시아, 중동,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접근하고 있지만 당분간 북한의 협력체제 구축은 중국이 중심일 것"이라고 내다봤음.
-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통일이 멀리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문턱에 와있을 수 있다"며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의 작은 분란에 대응해 평화통일을 멀리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북한을 품고 평화통일을 이룰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후진타오 "中朝 협력관계 계속 발전 시킬터"(10/13)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중·조(中朝) 친선협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음.
- 후 주석은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공동 명의로 김 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앞으로 보낸 답전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 건국 62주년(10.1)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준 데 사의를 표한 뒤 "중국의 당과 정부는 계속 확고부동하게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후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전통적인 조중 친선은 오늘 쌍방의 공동 노력에 의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고 밝혔음.

라. 러·북 관계

● 북러, 나진~하산 시범열차 운행행사(10/13)

-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 구간의 시범열차 운행행사가 13일 함경북도 나선시 두만강역지구에 있는 '조러(북러)친선각' 앞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행사에는 북측에서 주재덕 철도성 부상, 황철남 나선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철도부문 일꾼, 나선시 근로자들이 참석했고, 러시아 측에서는 발레리 리셰트니코프 철도공사 부사장, 이고리 사기토프 주북 러시아대사관 공사참사 등이 함께 했음.
- 리셰트니코프 부사장은 연설에서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는 철도 운수 분야에서 협조는 새 화물노선을 여는데 뜻 깊은 사변"이라며 "시범열차 운행이 양국 외교관계 수립 63주년을 계기로 더



-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 주재덕 부상은 "나진~하산 철도 구간에서 화물수송이 북한과 러시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경제교류에 이바지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 중앙통신은 이번 행사와 관련한 연회가 있었고, 시범열차는 행사를 마친 뒤 하산을 향해 출발했다고 전했다.

마. 기 타

● 금강산 외국인관광 시작...17일부터 4박5일(10/10)

-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국제관광이 실시됨.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10일 자체 홈페이지에 "외국 여행사로는 유일하게 금강산 관광상품을 판매하게 됐다"며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나선~금강산 국제관광을 진행하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12일까지 신청해달라"고 공지했음.
- 이 여행사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미국과 영국 등 서양의 개인 여행객을 모아 그룹관광 형태의 관광을 진행하는 회사임. 지난달 말 중국인 관광객 100여명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금강산 특구를 관광한 적이 있지만 국적과 관계없이 금강산 관광객을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공지에 따르면 관광상품의 가격은 중국돈 8천500위안(한화 157만 원 가량)이며 모집인원은 100명임.
- 이 여행사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 들처럼 중국 훈춘에서 북한 나선으로 이동한 뒤 만경봉호를 타고 금강산을 방문하는 코스로 관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측은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금강산 관광일정 통보를 미루다 지난 9일 오후에야 여행사 측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음. 한편 지난달 초 금강산 관광 상품과 함께 칠보산 열차 관광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 여행사는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만 실시한다"고 정정했음.

● 정부, 중국·일본에 금강산관광 투자 자제 요청(10/11)

- 북한이 외국과 손잡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중국과 일본 측에 투자 자제를 요청했음. 경주에서 유엔 국제관광기구(UNWTO) 총회에 참석 중인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11일 일본, 중국 대표와 차례로 개별 면담을 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했음.
-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대아산을 비롯한 우리 측 재산을 일방적으로 압류하고 외국 투자자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 중국이 금강산 관광에 투자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음.
- 면담에는 일본 국토교통성 켄 오쿠다(Ken Okuda) 부대신과 중국 국가여유국 두 지양(Du Jiang) 부국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한국 정부의



의사를 본국에 잘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정부는 UNWTO 총회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북한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통일부 장관 교체 이후 정세 변화와 회의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 면담 형태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을 압류하고 외국 사업자를 활용한 관광 재개가 가시화된 데 따른 1차 대응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의 반응과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됨.

● <中-러시아, 北나선특구서 고지선점 경쟁>(10/14)

- 북한이 최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나선 특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경쟁이 벌어지는 양상임. 북한과 러시아는 13일 하산~나진간 화물열차 시범운행을 했고, 북한 두만강역에서는 양국 철도 관계자들이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음. 나선에서 교통인프라 구축의 상징적 행사로 볼 수 있음.
- 러시아가 나진~하산 시범열차를 운행한 데 이어 중국은 다음 달 훈춘과 나진항을 잇는 53km의 도로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도로, 철도, 전력, 항만 등의 인프라가 완비되면 특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그동안 빈약한 인프라는 나선특구 개발에 최대 걸림돌로 꼽혀왔음. 중러 양국이 이처럼 나선특구 인프라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데는 양국이 나선특구 진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경쟁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양국은 이미 나진항의 부두 이용권까지 경쟁적으로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양국은 또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선 개발에 발벗고 나서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동북 3성(랴오닝·헤이룽장·지린성)을 본격 개발하는 동북진흥 계획에 착수했고, 이는 북한의 경제개발과 연계한 '창·지·투(長吉圖)계획'으로 발전했음.
- 중국의 경우 1990년대에는 동북 3성 개발에 관심이 크지 않았고, 민간 기업도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험부담 때문에 대북진출을 꺼렸음. 최근 중국의 활발한 나선 진출은 북한의 나진항, 청진항을 통해 동해 출항로를 확보해야 동북진흥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러시아도 나선 진출을 통해 한반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음.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 남북한과 러시아 간 가스관 연결 등의 굵직한 경제 프로젝트를 주도하려면 부동항인 나진항을 끼고 있는 나선 진출이 필수적임.
- 1991년 북한이 나선지구를 특구로 지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임. 중러 양국의 이 같은 투자 경쟁을 의식한 듯 나선특구 개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도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것으로 비쳐짐.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9년 12월 나선특구를 방문해 제조업, 물류 및 교통, 관광 등 3대 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음. 북한은 지난 8월 나선에서 국제상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는 등 나선특구 홍보에도 눈에 띄게 열을 올리고 있음.
-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북한이 1991년 나선 지구를 특구로 선포했을 때는 준비 없이 의욕만 앞섰는데 지금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필요성과도 맞물려 있고 그만큼 나선특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음.
- 하지만 북한이 특구개발 과정에서 체제유지에 악영향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1990년대의 실패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미군범죄 초동수사 강화' 검토(10/10)

- 한·미 양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해 우리 수사당국의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내달 중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산하 형사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 등 우리 수사 당국이 미군범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중으로 SOFA 합동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SOFA 개정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군 측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SOFA 운용 개선 논의에 적극 응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음.
- SOFA 22조 5항은 살인·강간·방화·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살인·강간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대해서만 한국 측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정부는 조만간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을 소집해 관련 대책을 본격 검토할 예정임.

● <美의회, 한미FTA 압도적 지지로 가결>(10/13)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미 의회 하원 본회의장의 방청석을 찾은 데이비드 드라이어(공



- 화. 캘리포니아) 의원이 한덕수 주미한국대사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음.
- 본회의장 내에 서있던 몇몇 다른 의원들도 한 대사를 쳐다보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축하의 뜻을 전했고, 이에 한 대사도 손을 흔들며 답례했음. 마지막까지 초조하게 표결을 지켜보던 주미대사관 직원들도 방송을 통해 최종 결과가 발표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손을 맞잡고 "수고했다"며 서로 격려했음.
 - 한국의 노무현 정부,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가 지난 2007년 6월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뒤 무려 4년 3개월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하원 표결 절차는 이날 단 5분 만에 종료됐음.
 -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 FTA 이행법안에 대한 토론은 오후 4시 40분까지 지루하게 이어졌으나 이후 표결은 말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임.
 - 토론 직후 구두표결(voice vote)에서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전자표결에서 찬성 278표, 반대 151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예상대로 무난하게 가결 처리됐음. 큰 쟁점이 없었던 미·파나마 FTA 법안(300대 129)에 비해서는 반대표가 많았으나 미·콜롬비아 FTA 법안(262대 167)보다는 지지표가 많았음.
 - 무역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한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59명이었으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예상 밖으로 21명이나 나왔음.
 - 한국 등과의 FTA 법안은 하원 표결이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졌고, 역시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토론을 이어가던 상원도 토론 종결을 선언한 뒤 당초 합의대로 한·미 FTA 법안부터 차례로 표결을 시작했음.
 - 이에 앞서 민주·공화 양당은 3개 FTA 법안에 대해 총 60시간의 토론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염두에 두고 12시간으로 줄였으나 이마저도 모두 채우지 않고 하원으로부터 법안이 도착한 직후 표결 절차를 개시하는 '파격'을 선보였음.
 - 하원과는 달리 의회 직원이 일일이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순서에 상관없이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상원의 표결결과 는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집계됐음.
 - 이는 미·파나마 FTA 법안(77대 22)이나 미·콜롬비아 FTA 법안(66대 33)보다 찬성이 많은 것으로, 그동안 상원에서 보여준 한·미 FTA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음.
 - 특히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토론 절차를 끝내고 본회의장 내에서 여기저기 모여 환담하던 의원들은 집계하는 의회 직원에게 손가락을 위로 치켜올려 '찬성' 표시를 하거나 아래로 내려 '반대' 표시를 하는 등 한국 국회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도 연출했음.
 - 오후 7시 25분 시작된 표결은 일부 의원들이 의사표시를 늦게 하는 바람에 20분 가량 소요돼 하원보다는 처리시간이 길었음. 이에 앞서 하루종



일 진행된 토론에서는 찬성 의원들이 FTA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 데 비해 반대 의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길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음.

- 하원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의 주력산업을 언급하며 한·미 FTA로 인한 수출 증대 및 일자리창출 효과를 강조했고, 일부 의원은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모습도 보였음.
- 그러나 로사 들로로(민주, 코네티컷) 의원은 한·미 FTA가 중국산이 불법으로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피트 드 파지오(민주, 오리건) 의원은 한국 자동차업체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 협정으로 미국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반대했음.
- 상원에서도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 의원이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으로 넘어와 다시 미국으로 수출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문제 삼는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한·미 FTA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음.

● 한미 고위급 경제통상협의회 20일 열려(10/13)

- 다자경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제1차 한미 고위급 경제통상협의회가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G20, WTO 등 주요 다자경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국제경제이슈에 대한 한미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외교부는 이어 21일 워싱턴에서 미국 주요 연구소 중 하나인 브루킹스 연구소와 공동으로 'G20의 모멘텀 회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현황 점검, G7과 G20의 경제위기 대응 고찰, G20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됨.

● <韓美안보동맹,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버전업'>(10/14)

- 지난 58년간 지속돼온 한국과 미국의 안보·군사 동맹 관계가 경제 동맹을 포함한 다원적 전략 동맹 관계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전기를 맞게 됐음.
- 미국을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안보 동맹에 더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 동맹 수립으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 데 합의했음.
- 여기에는 지난 2009년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경제 위기, 테러리즘, 기후 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에 양국이 기여하는 '다원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미가 깔려 있음.
- 예전대 지난 1953년 양국 간 군사 동맹 수립 이후 지속돼온 안보 동맹이 '한미 동맹 1.0'이라면 경제 동맹을 더한 다원적 동맹은 '한미 동맹 2.0'이 되는 셈임.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동맹이 군사동맹에 경제동맹을 합해 하나의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동맹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역사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 ◇경제동맹국 'KORUS', 재정위기 타개 앞장 = 특히 양국 정상이 한미 FTA 발효를 통한 경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대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양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로(정상회담 발표문)" 의견을 모은 점이 주목됨. 한미 양국이 힘을 모아 세계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구원 투수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대목임.
- 두 정상이 외환 유동성 공급을 통한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금융 당국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찾기로 한 것 역시 '새로운 한미 동맹'의 신호탄으로 읽힘. 다만 두 정상이 이러한 다원적 동맹의 착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미 FTA의 성공적 발효를 든 만큼 이 대통령은 귀국 후 국회의 조속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대북 공조 강화.. 방위공약 재확인 =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향후 양국 안보 동맹과 대북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두 정상은 또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증대에 합의했으며, 북한의 핵 활동 즉각 중지와 함께 북한의 핵 포기 및 국제 관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함으로써 빈틈없는 대북 협력 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했음. 이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통한 한미 정상상의 이 같은 '찰떡 공조'는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한 북한에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임.
- ◇녹색 분야도 선도적 협력 =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점에 동의했음. 이에 따라 양국은 녹색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녹색 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함께 추진키로 했음.
-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지식경제부와 미 에너지부는 클린 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한미 클린 에너지 공동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했음.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약정 체결은 세계 각국을 통틀어 녹색 성장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제협력 사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교육, 과학기술, 국제사회 지원 분야 등으로 실질적인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음.
- ◇리비아 공동 지원 합의 = 두 정상은 양국 간 국제사회 지원 협력의 선도적 사례로 먼저 내전 끝에 새 정부를 수립한 리비아를 지원하는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음.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 경제재건, 행정 역량 배양, 기반시설 건설, 보건의료 여건 개선, 직업 훈련 등을 한미 양국이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임.



- 양국이 공조하되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 각자 맡을 부문과 함께할 부문을 나눠 지원 사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리비아는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계획을 통해 리비아 신정부와 여러 면에서 중장기적이고 우호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음.

● <李대통령 美국민방문 성과와 의미>(10/15)

- 이명박 대통령이 닷새간의 미국 국민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일(이하 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름. 워싱턴 D.C.와 디트로이트, 시카고로 이어진 이 대통령의 국민 방문 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미 양국이 지난 58년간 지속돼온 안보·군사동맹 관계를 경제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 전략동맹 관계로 한 차원 격상키로 합의한 부분임.
-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안보동맹에 더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동맹 수립으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 데 합의했음.
- 지난 2009년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경제위기, 테러리즘,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에 양국이 기여하는 '다원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임. 물론 이러한 다원적 한미 동맹의 착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미 FTA의 성공적인 발효를 빼놓을 수 없음.
- 이를 위해 미국 의회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관례를 깬 초고속 심의를 거쳐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대통령의 국민 방문 기간에 맞춰 미 의회와 행정부가 파격적인 예우를 한 것임.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부터 국회의 조속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이자 13년 만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의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임.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데 연설의 초점을 맞췄고 미 의회가 한미 FTA를 조속하게 비준해준 데 대해 사례했음.
-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연설에 뜨겁게 호응하면서 기립박수 5차례를 포함해 무려 45차례나 갈채를 보내 화답했음. 이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한 외국 국기원수들 가운데 압도적인 최다 기록임.
- 이 대통령에 대한 미국 측의 파격적인 예우는 이뿐만이 아니었음.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의 한식당에서 비공식 만찬을 함께했고 디트로이트의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 생산공장에도 동행했음.
-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의 비공식 만찬을 백악관이 아닌 외부에서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미국 음식이 아닌 상대국의 전통 음식을 메뉴로 선택한 것도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함.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외국 국가 원수와 함께 지방 도시를 방문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임.



- 이 대통령은 또 미 국방부(펜타곤)의 요청으로 펜타곤의 심장부인 '탱크 룸'을 방문,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정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음. 한국 국가원수로는 첫 펜타곤 방문인데다, 미 합참의장 전용 상황실인 탱크룸에서 외국 정상이 미군 수뇌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받은 사실 역시 전례가 없는 일임.
- 이밖에 이 대통령은 워싱턴과 시카고에서 현지 동포 및 경제인들을 잇달아 만나 한미 FTA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특유의 '비즈니스 외교'를 이어갔음.

나. 한·중 관계

● <“선처만 바라나”..탈북자문제 정공법 고개>(10/16)

- 지난달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처리 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이제는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그동안 "탈북자는 정치적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유의 불법월경·불법체류자"라는 중국의 입장에 따라 탈북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때그때 우회적으로 접근해서 풀었지만, 이제는 원칙을 세우고 정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임.
-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의 선처만 바랄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난민 조약에 가입한 국가라는 점을 토대로 탈북자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탈북자 문제는 더 이상 뒷거래로 풀 게 아니다"면서 "인권문제로 보고 국제인권법과 난민조약에 따라 정당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난민 조약 등에 가입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할 것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는 뜻임. 그 방법으로는 중국에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다자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통일원 차관을 지낸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지난 5일 외교협회 세미나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 국가가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방법은 그 국가를 계속 거명·비판해 체면에 손상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 내 탈북자를 돕는 한 외교 소식통도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접근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면서 "유엔 난민기구 등 유엔기구를 활용해 탈북자의 난민 대우를 이끌어 내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별개로 북·중 관계와 양국이 체결한 조약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태도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음. 또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빚어지면서 그나마 있던 탈



- 북자들의 한국행 우회로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옴.
- 이와 동시에 중국에 난민 조약 등의 준수를 요구하기 전에 국내에서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외교부 내에 있음. 정책 이전에 탈북자를 얼마나 어떻게 수용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임.
- 중국 문제를 다루는 한 외교관은 "장기적으로 탈북자를 어느 정도나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우할지 등에 대해 먼저 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중국 내 탈북자 문제도 그 틀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음.
- 외교부 일각에는 탈북인권단체나 정치권 인사 등의 한탕주의식 접근이 일관된 정책 수립·집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도 있음. 여기에는 탈북자들이 체포돼 투지금이 떼일 것을 우려한 탈북 브로커 등의 제보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선에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음.

다. 한·일 관계

● 김외교, 마에하라 등 日 의원진과 오찬회동(10/10)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0일 방한 중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책조사회장 등 일본 여당 의원들과 회동한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음.
- 김 장관은 마에하라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일본 민주당 내 '전략적 일한(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6명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북한 문제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 우리 측에서는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과 조세영 동북아국장 등이 동석함.
- 일본 외무상을 지낸 마에하라 정조회장 등은 지난 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며, 이날 오후에는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임.

● 日 관방장관 "위안부 청구권, 완전 해결됐다" (10/11)

- 일본의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우리 정부가 협의를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의 청구권 문제와 관련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견해를 밝혔음.
-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각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부로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방침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 일본 정부와 총리실을 대변하는 후지무라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이처럼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때의 청구권 협정 체결로 위안부의 배상 청구권 문제도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임.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



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여기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韓日,李大통령 12월 방일 최종 조율"(10/12)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12월 방일과 관련 최종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이 12월 상순 일본을 방문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회담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중임.
- 신문은 "일본 측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초청했으나 독도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의 청구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에따라 이 대통령이 단기간 실무 방문하는 쪽으로 양국 정부가 방향을 바꿨으며, 양국 정상의 서틀외교 실적쌓기를 우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노다 총리는 이에 앞서 이달 18일과 19일 이틀간 한국을 공식 방문함. 노다 총리는 한국 방문에 이어 12월 중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중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정상회담의 의제 등을 논의함.

● 정부, 유엔총회서 '위안부' 日법적책임 제기(10/12)

-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공식 거론했음.
- 신동의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열린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 토론회에서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대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음.
- 신 차석대사의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중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후 양자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나온 것임.
- 정부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아닌 유엔 총회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은 지난 1997년 제52차 총회 이후 처음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양자협 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다자외교 차원에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신 차석대사는 또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도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 특히 군대 위안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신 차석대사는 "고문방지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기타 유엔인권협약기구들도 군대위안부 관련한 권고를 통해 이번 문제가 여전히 해



- 결되지 않은 시안임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특히 "최근 우리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제안한 바 일본 정부가 이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일본 측은 이날 토론에서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여성의 존엄성에 큰 모욕이었음을 인정하며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겪었던 모든 위안부 여성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참회를 표한다"고 밝혔음.
 - 이어 "일본 정부는 1995년 7월 일본 국민과 함께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해 고령의 위안부에 대해 보건 서비스와 사죄금을 포함한 최대한의 보상을 지급했으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가 지금까지 유엔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모두 6차례임.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진상조사 노력을 가속화하고 진지한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음. 1994년 제49차 총회에서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주목하고 유엔과 비정부기구(NGO)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관련 인권기구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 또 1995년 제50차 유엔총회에서 역사적 사실로서 진상규명과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부각시키고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관련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음. 1997년 제52차 총회에서는 일본 측의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시도는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으며 일본 정부가 인권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했음.
 - 정부는 2007년 제62차와 2008년 제63차 총회에서 무력 분쟁지역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
 - 정부는 내년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일본 정부를 직접 지목하며 군대 위안부 관련 해당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日, 18일 총리 방한때 조선왕실의궤 일부 반환(10/12)

-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조선왕실의궤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우리 정부에 밝혀왔음.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2일 오전 방한, 조세영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 일본이 강탈해 간 한국 도서 1천205책은 6월10일 발효된 양국 간 한일도서협정에 따라 오는 12월10일까지 반환되도록 돼 있으나 일본 측은 이번 총리 방한 때 양국 우호협력의 상징으로 도서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희망사항을 긍



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반환되는 도서에는 일본 궁내청의 왕실도서관인 쇼료부(書陵部)에 있는 조선왕실의궤와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이 포함돼 있음.

● **日 언론 "오바마,李大통령 이례적 예우"(10/14)**

- 일본 언론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예우했다고 평가했음. 교도통신은 14일 미국 정부가 이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예우해 한국과 미국의 밀월이 부각됐다면서 "이는 히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 때 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겨 '외교 표류'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고 보도했음.
- 통신은 또 조지워싱턴대학의 빅터 차 교수의 말을 인용해 "가치관이 비슷한 한미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으며, 총리가 자주 바뀌고 동일본대지진으로 타격을 받은 일본의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국제적 플레이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음.
- NHK방송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함께 지방 도시인 디트로이트를 방문하는 등 함께하는 시간이 10간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미국의 이례적인 환대이다"고 보도했음.
- 이 방송은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안전보장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동맹관계에 더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면에서의 동맹도 강화하면서 관계가 한 층 강고해졌다"고 평가했음.
- 산케이신문은 "양국 정상이 비공식 만찬을 위해 워싱턴 교외의 한국요리점을 방문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상대국의 요리점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전했다.
- 일본 언론은 미국 의회가 한국과의 FTA를 비준해 한미 FTA에 큰 진전을 이루면서 일본이 무역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우려했음.
-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FTA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차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본 업체들은 한층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이 신문은 일본이 한국에 뒤진 FTA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아사히신문은 미국 의회가 한국과의 FTA를 비준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자유무역의 허브를 내세울 수 있게 됐다면서 일본 기업이 걱정이라고 썼음. 이 신문은 한국이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 시장은 3천510만대에 달하지만 일본은 FTA가 늦어지면서 570만대에 그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산케이신문은 한미 FTA가 발효할 경우 일본은 2020년까지 자동차, 전자, 기계 분야에서 대미 수출이 1조5천억엔(약 22조원) 줄고, 3조7천억엔(약 55조원)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음.



라. 미·중 관계

● 中, 美에 "내정간섭 말라" 촉구(10/12)

- 중국이 미국과의 제2차 아시아·태평양 사무협상에서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고 요구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12일 전했다.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아태사무협상 첫날 회의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인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이 카운터파트인 미국 측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그 같은 입장을 피력했음.
- 추이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시짱(西藏 티베트) 문제 개입, 위안화 환율 공격은 모두 내정간섭"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추이 부부장은 아울러 남중국해 분쟁은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미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그러나 캠벨 차관보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음.
- 미·중 아태사무협상은 이틀간 열림. 특히 이날 미 상원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위안화 환율 조작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국 측은 이틀째 아태사무협상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해당 법안이 미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피력해왔음.

마. 미·일 관계

● "日 노다, 방미때 무기수출 제한 완화 표명"(10/14)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다음달 미국 방문 때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국 방문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음.
- 미국은 방위산업에서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무기 수출 제한을 풀도록 요구하고 있음. 일본은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 그동안 무기수출 3원칙을 견지했으나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 이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일본은 무기 수출을 금지한 대상국을 줄이고, 국제적인 무기수출 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와는 무기의 공동개발과 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할 방침임.
- 일본의 여당인 민주당도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해 외국과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외국에 팔 수 있게 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음.



민주당은 공산권 국가나 분쟁 당사국 이외의 국가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하되 평화 구축이나 인도적 목적에 한정하고,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할 국가를 제한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제3국으로의 무기 이전을 금지한다는 단서를 붙이도록 할 방침임.

● 日,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완화 검토(10/16)

- 일본 정부는 광우병(BSE) 감염을 계기로 수입을 제한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월령을 30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현재 월령 20개월 이내만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30개월까지 수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 노다 총리는 다음 달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쇠고기 수입제한 완화 방침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제한을 완화할 경우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산에 대한 수입 조건도 완화할 방침임.
-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월령 30개월까지 수입을 허용하되 광우병 발생이 상대적으로 잦은 유럽산에 대해서는 20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03년 말부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가 2005년 월령 20개월 이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했음. 이 때문에 2002년 24만에 달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도의 경우 9만9천에 그쳤음.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농민단체는 그동안 일본에 쇠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왔음.

바. 중·일 관계

● 日 전투기, 對中 긴급 발진 3배 급증(10/14)

- 해상뿐 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 4~9월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중국기가 일본 영공에 접근하는데 대비해 긴급 발진한 횟수가 83회에 이르렀음. 지난해 같은 기간(24회)보다 세배 이상 늘었고, 6개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많았음.
- 일본은 영공(=영해의 상공)보다 넓은 방공식별구역(ADIZ)에 식별할 수 없는 타국 비행기가 접근하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킴.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다고 해서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님.
- 중국 정보 수집기는 일본이 주장하는 동중국해의 영공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방공식별구역 안에서 전파를 수신하고 있고, 이때마다 일본 전투기가 출동해 긴장된 장면을 연출하는 셈임.
- 일본 전투기는 과거에는 주로 러시아를 상대로 긴급 발진했지만, 차츰



대 중국 발전 횡수가 늘고 있음. 올 4~9월 대 러시아 긴급 발전은 106회, 대중 발전이 83회였음.

사. 중·러 관계

● 中-러, 70억 달러 규모 경협 서명(10/11)

- 중국과 러시아가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중국 방문에 앞서 70억 달러(약 8조원) 규모에 달하는 각종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을 맺었음. 중국 외교부는 이날 양국의 관료들이 16개에 달하는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했다면서 경제협력 규모가 '기술이전, 연구 및 개발, 광산 개발 등의 분야에 걸쳐 70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 푸틴 총리는 이날 국영 석유·천연가스 회사 대표 등 160명의 수행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함. 푸틴 총리의 방중은 최근 차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역할을 교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임.

● 푸틴 베이징 도착..방중 일정 시작(10/11)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11일 정오 베이징에 도착, 이틀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총리는 12일까지 베이징에 머무르면서 윈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회담하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임.
- 푸틴 총리는 이번 방중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상호 경협 및 투자 확대 방안, 신기술 분야 협력, 주요 국제 문제를 의제로 올려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임.
- 이번 방중은 푸틴 총리가 내년 3월 대선을 통해 크렘린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더욱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 특히 푸틴 총리의 방중 기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장기 천연가스 공급 계약 문제에서 획기적인 논의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됨.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온 양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전용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공급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협의해왔으나 가격 문제에서 의견이 남아 있는 상태임.
-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와 이고르 세친 러시아 부총리는 양국의 에너지 실무 협상을 맡아 돌파구 마련 방안을 논의함.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에너지 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의 중요 구성 부분 가운데 하나"라며 "양국은 에너지 분야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푸틴 총리는 국영 석유·천연가스 회사 대표 등 160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방문해 대규모 경협 합의를 이뤄질 것을 시사했음. 양국은



푸틴 총리 방문 기간 38개 항목에서 55억 달러 규모의 경험 합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양국은 중동, 북아프리카 등 주요 국제 문제에서 공동 대처를 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브릭스를 주도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중동, 북아프리카 문제 대처에서 보조를 맞춰왔음.
-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15년간 양국은 평등신뢰, 공동번영에 기초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격상시켜왔다"며 "현재 양국과 역사상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고 호평했음.

● 푸틴, 브릭스 유럽지원에 난색(10/12)

- 중국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브릭스(BRICS)'가 나서 부채 위기를 겪는 유럽을 돕는 것에 부정적 뜻을 비쳤음. 푸틴 총리는 11일 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마치고 중국 기자들과 만나 "유럽연합(EU)이 부채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며 "브릭스 국가들이 이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푸틴 총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의 부채 위기가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의 협상력과 대응력 부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음.
- 푸틴 총리는 연내에 러시아의 숙원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그는 "러시아는 WTO의 규정에 맞춰 법체계를 완전히 개혁했으며 주요한 협상 상대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 중러 관계와 관련해 푸틴 총리는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 시절을 구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험을 한층 강화해나가고자 촉구했음.
- 아울러 푸틴 총리는 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뿐 아니라 공동 탐사와 개발에서도 협력해야 한다며 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음.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전용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푸틴 총리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소개해 논의에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음.
- 기자회견에 앞서 원 총리와 푸틴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경험 확대 방안 등을 의제로 놓고 회담을 했음. 원 총리는 양국 간 무역액을 2015년까지 1천억 달러, 2020년까지 2천억 달러로 늘리기로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원 총리는 또한 양국이 석유, 천연가스, 핵에너지, 석탄, 발전 등 에너지 분야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고자 제안했음. 푸틴 총리는 이에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갈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음.



- 내년 3월 대선을 통한 크렘린 복귀를 선언한 이후 중국을 처음 찾은 푸틴 총리는 12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만나고 이틀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 기 타

● 패네타, 21~28일 한국·일본·인니 방문(10/13)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12일(현지시간) 밝혔음.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패네타 장관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첫 방문에 나선다"면서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도쿄, 한국의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패네타 장관의 서울 방문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한 것임.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책을 긴밀히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임.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 추가도발 가능성,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상황 및 동맹 현안도 점검할 전망이다.
- 리틀 대변인은 "각각의 방문 장소에서 패네타 장관은 각료급 인사들과 일련의 만남을 가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음. 패네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리틀 대변인이 전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